'97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한국원자력학회

동북아 비핵지대화 논의 현황과 전망

이동진
한국원자력연구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진동 150

요 약

냉전 종식 후에도 동북아시아지역의 불안정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특히 핵군비와 관련하여 역내 각국의 동향은 매우 민감한 상태이다. 이런 면에서 이 지역의 비핵지대화는 이 지역의 불안요인에 대한 안전보장 장치가 될 수 있다. 이해 당사국들이 대체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객관적 상황은 비핵지대화 논의에 유리하다.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핵보유국들의 비보유국들에 대한 소극적 안보 약속, 둘째, 핵보유국 상호간의 핵 선제 불사용 합의, 셋째, 핵보유국의 핵감축 의지 표명, 넷째, 일본의 핵투명성 제고 등의 충족이 요구된다.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구상들로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려가 한창 고조되던 당시에 거론되었던 한반도 비핵지대화안, 동북아 비핵지대화안, 제한적 비핵지대화안 등이 있다.

5개 핵보유국들의 협조가 없는 한 비핵지대의 실현은 어렵다. 또한 역내에 3개 핵보유국을 가지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특성에 비춰 비핵지대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집단안보라는 보다 큰 틀을 전제로 하는 접근이 필요하며, 둘째, 핵보유국들의 거부반응을 고려한 점진적 방식의 채택이 요구된다. 그러나 무엇 보다도 역내 국가들 간의 신뢰 조성 및 평화와 안정의 증진이 우선해야 하며, 그 후 지역국가들 스스로의 주도로 논의를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I. 비핵지대의 개념과 의의

비핵지대 설정의 목적은 지역적 차원에서 핵무기의 확산을 막고 역내 국가들이 핵분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보장하는데 있다. 이러한 발상은 1950년대 중 최초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어 대서양조약(Atlantic Treaty), 외기권조약(Outer Space Treaty), 심해저조약(Seabed Treaty) 등으로 결실을 맺기도 했지만, 1962년 10월의 쿠바 미사일 위기 후 중남미 비핵국가들이 그들의 지역에서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라틴아메리카 핵무기금지조약(Treaty of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in Latin America, 일명 Tlatelolco Treaty) 체결 협상을 시작한 것이 인간의 거주지역을 대상으로 한 비핵지대화 논의의 효시로 볼 수 있다.

비핵지대의 일반적 요건은 첫째, 지역 당사국들은 핵무기·핵폭발장치의 생산·취득 및 그 통제권을 포기할 것(비보유 원칙), 둘째, 외국의 핵무기의 역내 배치를 불허할 것(비배치 원칙), 셋째, 핵보유국들은 비핵지대의 지위를 존중하고 역내 국가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 위협을 하지 않을 것(불사용 원칙) 등이다. 따라서 비핵지대란 '조약 또는 협약에 의해 핵무기의 보유, 배치 및 사용이 영구적으로 금지된 지역'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이념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엔은 1975년 12월 11일 제 30차 총회에서 핵보유국들은 비핵지대 내의 핵부재 규정을 존중

하고, 그 비핵적 지위를 교란하지 않으며, 비핵지대조약 당사국들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을 위협하지 말 것을 결의했다.

비핵지대 개념은 위와같은 여러가지 보장장치들로 인해 비핵무기국들의 안보를 증진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는 동시에, 나아가 핵보유국들의 영토 밖에 배비된 핵무기의 철수 요구를 통해 세계적 차원에서 군비통제를 촉진하는 보다 적극적인 지향성을 갖는다. 즉 비핵지대화는 핵비확산 체제를 핵비확산조약(NPT)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면서 지역의 불안 요인들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II. 동북아 비핵지대화 논의의 배경

1. 동북아 정세 - 핵문제를 중심으로

냉전의 종식으로 세계적 규모의 전쟁 가능성은 줄어들었으나, 국지적 불안정 요인은 도처에 상존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오히려 군비 증강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의 무기 구매액은 전 세계의 그것의 3분의 1을 웃돌고 있다. 이지역 각국은 군비 예산과 첨단 무기의 구입을 늘리고 국내 방위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군비증강 경쟁을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핵문제와 관련하여 동북아시아는 역내에 미국, 러시아, 중국 등 3대 핵보유국을 포함하고 있어 가장 민감한 지역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전체적으로 핵무기 감축을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은 아직도 이 지역의 배후에 핵군비를 포진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다량의 핵탄두를 극동지역에 배치해 둔 채 이를 이 지역에서의 정치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미, 러와의 핵능력 불균형을 이유로 미, 러가 주도하는 핵감축에 참여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등한 국제여론을 무릅쓰고 최근까지 핵무기 기술 완성을 위해 필요한 지하핵실험을 기어코 완료했다. 이들 3대 핵강국은 동북아시아를 그들의 세력이 부딪치는 치열한 현장으로 인식하여 이 지역 주위에 배치된 핵무기를 쉽게 포기하려 들지 않고 있다. 핵무기 비보유국이면서도 군사대국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는 일본도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을 표방하는 한편으로 주변상황의 변화 여하에 따라 당장이라도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적, 경제적, 물질적 하부구조를 완성한 상태에 있다.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문에 의해 현재 동결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핵카드로 오랫동안 세계의 이목을 긴장시켜 온 북한은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합의사항의 상호 이행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핵문제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는 소지를 남기고 있다. 오랜 핵협상 경험을 통해 핵카드의 안보·외교적 위력을 만끽한 바 있는 북한의 섣부른 결정이 미국과 한국 내의 강경론을 부추기고 일본의 핵개발 야심을 자극할 경우 이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대응 강도는 한층 더 증폭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의 혼란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

2. 동북아 비핵지대화 여건 분석

이렇게 볼 때 동북아시아의 비핵지대화는 이 지역에 드리운 핵 모호성을 불식함으로써 역내 국가들 간에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법적 약속을 이끌어 내기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핵무기로 인해 조성되고 있는 이 지역의 불안요인에 대해 매우 유효한 안전보장 장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이 지역의 안보 환경에 비춰 볼 때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촉진하는 요인 보다는 이를 억제하는 요인이 더욱 많은 듯하다. 우선 전통적으로 핵무기의 전략적 중요성에 집착해 온 서방 국가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은 비핵지대가 설정될 경우 미국의 억지력이 약화됨과 함께 핵무기를 적재한 미국의 선박과 항공기의 출입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을 꺼리고 있으며, 일본 또한 비핵지대화가 자국에 대한 미국

의 핵우산 제거로 귀결될 것을 꺼리고 있다. 이 지역에 3대 핵강국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여타의 비핵무기국들도 그들이 직접 또는 가까이서 경험했던 핵무기 또는 핵카드의 위력으로 인해 핵개발 유혹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도 또하나의 비핵지대화 억제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의 시기가 이 지역의 비핵지대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첫째, 냉전의 종식이 억지수단으로서의 핵무기의 효력을 떨어뜨렸으며, 둘째, 무르익어 가고 있는 미-러간에 핵무기 감축 논의가 이 지역의 비핵지대화를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셋째, 핵확산에 대한 범지구적인 우려가 국지적 비핵지대 설정의 명분을 강화하고 있으며, 넷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동북아 비핵지대화 논의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아 비핵지대화 논의가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핵보유국들의 비보유국들에 대한 핵위협 제거(소극적 안보공약), 둘째, 핵보유국들 상호간에 핵무기의 선제 불사용 원칙(non-first-use principle)에 관한 합의 도출, 셋째, 핵보유국들의 핵무기 감축 의지 표명(특히 중국은 미국 및 러시아의 전술핵무기 감축에 상응하는 전역핵무기의 감축·재배치 동의 의사 표명), 넷째, 일본의 핵무기 개발 포기의사의 명시적 표명 및 핵 투명성 제고, 다섯째, 북한의 핵 프로그램 투명화 등의 선행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3. 동북아 지역의 핵무기 배치 상황

(1). 러시아

동북아시아에서의 러시아의 핵무기 배치 유형은 아직까지 가장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로 남아 있어 개략적인 추측이 가능할 뿐이다. 러시아의 극동지역에는 Drovyanaya의 SS-11 기지, Yasnaya의 SS-11 기지, Svobodnyy의 SS-11 기지, Ukrainka의 공군기지, Pavlovskoye의 해군기지 등 5곳의 핵시설에 대략 1040기의 전략핵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개략적으로 파악되고 있다(전술 핵탄두는 1,000개 정도). 이들 다양한 전략체계의 사정거리를 감안할 때 역내의 모든 국가들은 이들이 야기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가운데 소련 붕괴 이래 러시아 극동지역의 군사체계가 크게 이완됨에 따라 러시아 극동지역의 핵무기 관리상태도 극도로 허술해져, 불의의 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 중국

중국은 사정거리가 13,000 km 이상인 DF-5 미사일 4-6기(러시아 및 미국 전역을 사정권 내에 두고 있음), 사정거리 4,750 km인 DF-4 미사일 10-15기(괌의 미군시설 및 모스크바 공격 가능), 사정거리 2,800 km인 DF-3 미사일 약 60기(일본내 미군 및 필리핀의 클라크 미 공군기지까지 도달 가능) 등의 ICBM 전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되고 있는 제한적 동북아 비핵지대 내에 배치되어 있는 핵무기는 6곳의 DF-3 기지(핵탄두 약 48개), 2-3곳의 DF-4 기지(핵탄두 9개), 2-3곳의 DF-5 기지(핵탄두 6개), 각각 12기의 DF-21 SLBM 9(사정거리 약 1,700 km)를 갖춘 2곳의 SSBN 기지, 36기의 Road Mobil DF-21a 미사일(사정거리 1,700 km), 150개의 전술핵탄두 등으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할 때 제안되고 있는 비핵지대 내에 있는 총 핵탄두 수는 대략 273개 정도로 추산된다.

(3). 미국

1991년 9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국 육·해군의 전술무기를 일방적으로 철수시킨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이는 동북아시아에서 작전중인 전술핵무기의 철수 방침도 포함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전술체계는 이 지역에 존재하지 않으나, 트라이던트 1 C4 미사일을 갖춘 8

척의 트라이던트 잠수함이 이 곳을 작전지역으로 포함시킴으로써 한국 및 일본에 대해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다.

III. 다양한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들

동북아 비핵지대화 논의의 기원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북한, 옛 소련 및 일본 사회당 지도자들이 행한 연설 등에서 이에 관한 빈번한 언급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냉전 시기라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감안할 때 이들의 언급은 지나치게 일반적이거나, 정치적 수사의 성격을 띠고 있어 신뢰성과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었다. 냉전 종식이라는 달라진 상황을 바탕으로 적실성을 갖추고 부상된 본격적인 동북아 비핵지대화 논의는 1991년 미국의 일각에서 제기된 제한적 동북아 비핵지대화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 제기된 각종 구상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한반도 비핵지대화안

한반도 비핵지대화 안은 동북아시아 비핵지대의 의제화에 앞서 북한의 NPT 탈퇴 선언으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던 1993년 전후의 민감한 시기에 이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균형된 접근 방식의 하나로 부상된 것으로써, 주로 중국과 일본의 민간학계에서 거론되었다. 당시 문제의 초점이 되고 있던 국가가 북한이었던 만큼 이 안의 골자는 첫째, 비핵지대를 한반도로 국한하고, 둘째, 핵보유국은 대상지역에 대해 소극적 안보 약속(NSA)을 제공하며, 셋째, 남북한은 원자력 활동을 평화적인 목적으로 한정하는 동시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사업을 포기하고, 넷째, 남북한은 모든 관련 시설에 대한 대칭적인 강제사찰을 수용하며, 다섯째, 미국과 한국은 북한을 겨냥한 팀 스피리트 등 군사훈련을 중지할 것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특히 이 안이 제시하고 있는 설득력의 근거는 북한에 대한 특별사찰이 문제가 되고 있던 당시의 상황에서 남북한 모두에게 대칭적인 강제사찰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북한이 특별사찰을 수용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권국으로서의 한국의 입장에서는 평화적 원자력 활동과 자주적 안보정책의 수립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 동북아 비핵지대화안

그러나 비핵지대의 개념이 지역적 접근 방식으로 집단안보의 틀을 정립하자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띠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한반도 비핵지대화안은 역내 국가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보다 거시적인 지역 핵비확산체제의 존재를 요구하는 것이다. 북한은 원자탄을 제조할 의사도, 능력도 없음을 공언해 왔고, 남한 또한 비핵화 선언을 통해 핵무기 제조 의혹을 살 수 있는 핵연료주기정책의 포기를 발표했기 때문에 남북한 어느 쪽도 지역 핵비확산체제의 설립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한반도 비핵지대화 구상에 비해 보다 광역적인 동북아 비핵지대화 방안은 주로 민간 학계에서 제기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 향후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분석·연구하는 동시에 각종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제한적 동북아 비핵지대화안

이는 미국의 조야가 주도하고 있는 단계적 비핵지대화 구상으로서, 현재 가장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전면적인 동북아 비핵지대화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반응을 감안해 초기에는 러시아 및 중국의 핵기지 일부를 존속시킬 수 있도록 하고, 순차적으로 상호 무기감축 단계로 이행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감축될 무기도 역외로 재배치할 뿐,

당장 폐기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이 기간중 미, 러는 START-II에 의해 2003년까지 이행하기로 한 핵무기 감축 계획을 충실히 추진하고, 중국이 그 이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안은 중국, 일본, 한국 및 러시아의 군사전문가들의 참여 하에 1991년 말 이래 미국의 국제전략·기술·정책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Strategy, Technology, and Policy; CISTP)의 조지아 기술연구소(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Georgia Tech)에서 검토 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1996년 3월에는 관련 각국의 고위 전문가들로 구성된 확대고위급회의(부에노스 아이레스 그룹)가 결성었으며, 이어 10월에는 40여명의 전문가와 6개국 정부 참관단이 참가한 가운데 그 2차회의를 갖고 세부사항에 관해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당사국

제한적 동북아 비핵지대에 참여할 당사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대만, 미국, 및 남·북한 등 8개국으로 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2). 적용지대

1단계의 비핵지대 획정에 관해서는 ① 한반도의 비무장지대 중앙을 중심으로 하는 반경 1,200 해리 이내의 지대로서 한반도와 중국, 대만, 일본, 몽골 및 러시아의 일부에 걸치는 지역(원형지대) ② 서쪽으로는 중국 북동부, 동쪽으로는 알래스카를 경계로 하는 럭비공 모양의 지역(타원형지대) ③ 북태평양의 일부 지역, 즉 중국 북동부, 러시아 동부, 미국 서부, 일본, 한반도, 몽골을 포함하는 지역(북태평양지대) 등 3가지 안이 제시되었다. ①안과 관련, 지리적으로 미국은 제외되지만 적극 참여 의사 표명하고 있다. ②안은 3개 핵보유국을 비롯, 역내의 모든 국가의 영토 일부를 포괄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하고 있다.

3). 임시기구

3대 핵보유 당사국들의 역내 핵무기 비배치 약속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핵 비보유 당사국들의 원자력 계획의 투명성 검증 등의 기능을 갖는 다국간 검증기구를 두어 당사국들간에 군사 및 원자력시설을 상호 방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기구를 궁극적으로 새로운 동북아 안보협력체제를 창설하기 위한 모태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그룹은 잠정적 당사국의 참여로 이 기구의 원형이 될 임시기구(Interim Agency)를 설립하여 비핵지대 협정의 세부사항을 기초하도록 제안했다. 임기기구의 소재지로는 블라디보스톡, 한반도, 울란바토르, 히로시마 등이 거론되었다.

4). 사찰 및 통제체제

핵무기 비보유 당사국으로 하여금 그들이 핵무기 개발 활동에 연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한 사찰을 수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IAEA 사찰체제를 원용할 수 있다는데 합의했다. 또 당사국의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통제·검증체제가 수립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그 성격과 업무는 임시기구가 결정하기로 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구상의 성공의 관건은 다량의 플루토늄을 보유함으로써 인접 국가들의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일본이 그들의 플루토늄 재처리시설과 핵물질 저장소를 다국적 사찰단에게 공개할 것인지 여부로 보인다. 또 이 구상은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기로 한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기정사실화 의도를 숨기고 있어, 한국으로서는 이에 대해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IV. 관련국들의 입장

1. 미국

미국은 원래부터 비핵지대화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얼마 전까지도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던 미국의 동북아 비핵지대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미루어 짐작된다. 미국은 아직까지 핵억지력을 군사전략의 기본 요소로 하고 있는 바, 비핵지대가 설정될 경우 자국의 핵억지력이 약화되고 핵무기를 적재한 미국의 선박·항공기의 활동에 지장을 받을 것을 꺼리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가 비핵지대화 될 경우 한국 및 일본에 대한 자국의 핵우산 효력이 떨어져 이들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미국이 1993년 6월 11일 뉴욕에서 발표된 북한과의 공동성명에서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의 사용 및 사용 위협 포기 용의를 밝힌 것은 종전의 '조건부 선제 불사용정책(conditional no-first-use policy)'에 얼마간의 변화가 시도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이러한 '소극적 안보 약속(negative security assurance)'은 남한에 대한 핵우산 제공, 즉 '적극적 안보 약속(positive security assurance)'과 일견 모순되는 것이어서 비상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미국측에서 제기된 '제한적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도 이러한 변화를 염두에 두고 장차 동북아 안보공동체 결성을 통해 이 지역에서 미국의 주도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러시아

옛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1985년 5월 (1) 아-태 및 인도양에서의 포괄적 핵실험 금지 (2) 아시아 대륙에서의 핵무기 사용 금지 (3) 핵보유국의 핵비보유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 금지 (4) 핵비보유국의 무조건적인 NPT 참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 아시아회의(All Asian Conference)'를 제안하고, 이어 1986년 7월 다시 한반도, 동남아시아, 남태평양 등을 포괄하는 비핵지대화 안을 제안, 아시아의 비핵지대화 논의에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옛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 또한 동북아 비핵지대화가 미국과의 핵균형 유지에 긴요하며, 자국의 이익에 배치되는 중국의 핵무장 강화, 일본의 새로운 핵무장 기도 등 이 지역에서의 핵확산을 억제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비핵지대가 설정될 경우 NSA도 제공할 용의를 표명하고 있다. 다만 동북아시아 전역이 비핵지대화 될 경우 핵무장을 한 러시아 태평양함대의 모항인 캄차카반도와 블라디보스톡 부근의 극동 해군기지가 무력화될 것을 꺼려 일단 한반도 비핵지대화에 보다 더 적극적이다.

3. 중국

중국은 한반도 비지대핵화는 일관되게 주장하면서도 자국의 핵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차원의 비핵지대화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중국은 자국의 핵잠수함이 남지나해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 중국은 주요 핵무기 보유국이 현저하게 핵무기를 감축하지 않는 한 전술 및 전역핵무기 감축을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내심 역내 국가들에 대한 섣부른 핵무기 불사용 및 NSA 제공이 이 지역에서의 자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일본이 가진 핵 잠재력 또한 중국이 아직까지 동북아 비핵지대화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해 온 이유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1993년 3월 북한의 NPT 탈퇴 선언을 전후하여 중국은 처음으로 미국이 제안한 제한적 동북아 비핵지대화 안에 대한 논의에 참여할 의사를 비쳤다. 이는 장차 동아시아 국가, 특히 일본 및 북한으로부터 핵옵션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다짐을 받는 동시에 자국의 핵억지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또한 중국은

이와같은 지역적 체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이 지역의 경제개발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그 과실에 대한 지분을 요구할 수 있으리라는 계산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일본

비핵정책을 헌법에 명문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옵션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노정하고 있는 일본은 즉시라도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 물질적,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 예민한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일본도 동북아 비핵지대화안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방 국가들과는 달리 일본은 유엔에서 아프리카, 중동, 남아시아, 인도양의 비핵지대화 및 틀라텔롤코, 라로통가 조약등 다른 지역이 관련된 비핵지대화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찬성 투표를 해 왔으나, 유독 동북아 비핵지대화 안에 대해서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첫째, 동북아 지역의 비핵지대화가 일본이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핵우산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일본의 핵능력 개발에도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본은 우선 자국이 제외된 한반도의 비핵화를 바라고 있으며, 이를 보장하고 있는 제한적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에도 알마간 긍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5. 북한

1981년 3월 북한 노동당과 일본 사회당이 공동으로 동북아 비핵·평화지대 설정을 제안한 이래 북한은 일관되게 이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제안은 (1) 동북아시아에서의 핵무기의 총체적인 제거 및 폐기 (2) 이 지역에서의 핵 및 생화학 무기의 개발, 실험, 생산, 보유, 운반, 수입, 사용 금지 (3) 모든 외국 군대 및 기지의 이 지역으로부터의 철수 (4) 지역 내에서의 공격적 군사동맹의 금지 (5) 한반도, 일본 및 그 근해를 대상으로 한 비핵지대 설정 등을 담고 있다. 이로 볼 때 북한의 제안은 동북아 비핵지대화에 머물지 않고 이 지역을 보다 적극적 의미의 평화지대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북한은 이를 통해 한국에 배치되어 있는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제거함으로써 미국의 자국에 대한 핵위협을 줄이려는 듯하다. 즉 북한은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거를 기도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기조에서 1991년 7월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남북한이 1992년 말 이전에 이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할 것을 제의했다. 북한은 이 공동선언에 남북한에 의한 핵무기의 실험, 제조, 보유의 금지, 핵무기의 한반도 배치 및 통과 금지,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의 핵무기의 완전 철수, 핵보유국의 한반도 비핵지대 인정과 북한에 대한 NSA 제공 등을 담을 것을 주장했다. 1991년 12월 31일에 발표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한 공동선언(비핵화공동선언)'은 핵무기의 주둔, 개발, 취득, 실험을 금지하고 상호검증체제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핵지대의 개념을 담고 있다. 미국 핵무기의 이 지역으로부터의 철수와 함께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 봉쇄도 염두에 두고 있는 북한은 동북아 비핵지대의 실현을 통해 이를 관철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6. 한국

한국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체제 와해에 기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는 북한의 비핵·평화지대안이 제안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 오면서 현재까지 동북아 비핵지대화 제안에 대해 공식적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다만 1991년 11월 발표된 노태우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평화선언'과 위에 기술한 비핵화공동선언에 나타난 한국의 공식 입장은 ① 핵무기의 생산, 보유, 저장, 배치, 사용 포기 ② 핵 재처리시설 및 우라늄 농축시설의 비보유 ③ 미국의 핵우산 유지 ④ 핵무기를 적재한 미국의 선박 및 항공기 통과 허용 등으로 파악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③, ④항을 부정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지대화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동북아 비핵지

대화가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① 역내 모든 국가들이 동북아 비핵지대화에 참여할 것 ② 역내의 핵보유국들은 비보유국들에 대해 핵무기 불사용을 보장할 것 ③ 동북아 비핵지대가 한-미 안보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④ 비핵지대화 규정이 국제법이 보장하고 있는 참여국들의 통과권을 저해하지 않을 것 ⑤ 비핵지대화 규정이 참여국들의 위반행위를 탐지할 수 있는 검증 방법을 포함하고 있을 것 ⑥ 비핵지대화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국은 북한 핵시설의 동결 및 해체상황, IAEA의 특별사찰을 통한 북한의 과거핵 규명 등의 진전에 맞춰 비핵지대화의 범위와 수준을 일단 제한적으로 적용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도 국가안보를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핵무기를 적재한 미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의 자국내 항만 또는 기지의 방문을 거절할 수 없는 상태이다. 한국으로서는 미국이 제안한 제한적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이 위에 열거한 조건들을 대체로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서도 이 제안이 한국이 필요로 하는 평화적 목적의 핵주기 개발활동까지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 다소 문제성을 느끼고 있다.

V. 전망과 대응

오늘날 일반적으로 비핵지대화 논의의 진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쟁점으로는 첫째, 핵보유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평화시 핵무기 비배치 원칙을 전시까지 확장하는데 반대하고 있다는 점과, 둘째, 비핵지대화 개념이 담고 있는 역내 국가들에 대한 핵보유국의 NSA 및 비핵지대 당사국들의 핵보유국들에 대한 역내 핵무기 사용 불허 약속 등이다. 불신과 갈등 요인이 그대로 남아 있는 동북아시아의 현상황에서 전쟁 발발시 이들 약속의 준수는 일부 국가들에 있어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남북한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이 보다 우선적인 문제이다.

또한 5개 핵무기국가들의 통일된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 비핵지대의 창설이 순조롭지 못하며, 설사 어렵게 창설되었다 할지라도 파행적인 운영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태평양, 동남아시아, 중동 등에서의 비핵지대 창설 노력이 이들의 비협조로 당초의 의도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가져왔거나, 실패로 돌아가곤 했음을 보아 왔다. 따라서 역내에 3개 핵보유국을 두고 있는 동북아시아적 특성에 비춰 비핵지대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집단안보체제라는 보다 큰 틀 안에서 비핵지대를 구현하는 접근방식, 둘째, 핵보유국들의 거부반응을 고려한 점진적 방식 등의 채택이 요구된다. 후자와 관련, 초기 단계에서 우선 한반도 주변에 국한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비핵지대화를 실현한 후 그 성공 여부를 보아 가면서 그 적용 영역을 일본 및 그 인근 해역과 중국 및 러시아의 일부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나마도 희망적인 사고를 반영한 것일 뿐이며, 역내 국가들 간의 신뢰 조성 및 평화와 안정의 증진이 우선 시급한 형편이다. 무엇보다도 동북아 비핵지대의 개념 정립과 세부 내용의 입안은 현재 성숙되고 있는 논의의 분위기를 십분 활용하여 동북아 지역 국가들 스스로의 주도로 이끌어 나가야 하며, 이러한 논의가 또다시 강대국의 개입논리와 이해관계의 흐름에 맞겨져서는 안될 것이다.